

구글·유튜브 5·18 역사왜곡 통로 악용

방통위 삭제·접속차단 결정에도 묵묵부답...1건도 이행 안해 5월단체 "제재방안 나서야"...국회에도 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5·18 역사왜곡의 통로로 구글·유튜브(YouTube)가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유튜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이하 방통위)가 내린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글·유튜브는 방통위의 결정에 즉각 응답해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차단하라"고 촉구했다.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에 대

해 올해 3월에 30건, 5월에 77건, 7월에 20건 등 총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유튜브 영상 110건)을 적발,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구글·유튜브에서 적발된 110건 중에서 단 한건도 접속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른 웹사이트들은 적발된 17건 중 9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등 극우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는 뉴스 형태로 올라온 5·18 관련 가짜 뉴스들이 사실 확인 작업 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실제 이날 구글·유튜브를 직접 검색해 본 결과, '유공자 유족들의 국가고시 가산

점 10%', '5·18유공자 가족은 가산점이 있어 공무원 취업 기회를 싸잡아하고 있다', '5·18때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이 민간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5·18 때 광주에 투입돼 살아남은 북한군 32명이 6월15일 공화국영웅 훈장을 받았다', '헬기 사격은 없었고,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5월 단체들은 "구글·유튜브는 방통위의 결정을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를 기만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국회는 구글·유튜브에 치외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튜브는 5·18 왜곡활동을 방치해 기업과 기관의 광고를 통해 5·18 왜곡세력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최근 5·18 왜곡 주범 등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5·18 왜곡·가짜뉴스는 여전히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구글·유튜브 등 관련 플랫폼 본사가 해외에 있어 더 이상 '법 규정이 없다'는 말로 현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들은 또 국회를 향해 "가짜뉴스 대책 관련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5·18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6월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정종제 부시장 소환

검찰, 직권남용 조사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검찰에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종제 부시장이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관련 특검감사를 지시한 이후, 업체 간 순위 등이 뒤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운영팀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도시공사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일부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광주시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바뀌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이유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검찰의 시정 압수수색 이후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처음 제출된 서류에서 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특검감사와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 부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남갑 입후보 예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무국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추가 의혹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간부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전 임직원 자녀의 채용 비리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무국장이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경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계박 의원의 설명이다.

영상의학과에 전·현직 보직자의 자녀가 6명이나 일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상의학과 합격자 중 1등은 사무국장 아들, 2등은 영상의학과 실장 아들, 6등은 사무국장 아들의 학장 시절 여자친구였다. 총 10명을 채용한 전형에서 영상의학과 실장 아들의 필기 점수는 7등이었으나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이 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임명절차 중단 법원 강동완 가져본 신청 인용

법원이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총장의 가져본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총장 임명 절차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유현중)는 23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져본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여주시청 진입 시도하는 시민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주시 만흥지구에 추진중인 공공지원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2일 오전 여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이사장(회)은 지난 9월 결정한 강 전 총장의 2차 해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신임 총장 임명 절차를 중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17대 총장 임명을 결정하는 이사회 개최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강 전 총장(신청인)과 조선대 이사장(피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이 사건 가져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 사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대꾸도 않는 지역 대학들

8개 대학 596건 요청 받아 일부 대학 규정 어기며 무시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이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

월까지 광주·전남지역 8개 대학이 59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받았으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정보공개에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에

선 고구려대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경민 의원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대학이 정보공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협조하는지를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에 처벌 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5·18때 계엄군 저지 경계 선 남성 39년만에 무죄 판결 받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3일 소요죄·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최모(6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일으킨 군사 반란을 시작으로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등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시내 진입을 저지하는 경계를 서는 등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연합뉴스

20대 화물차 운전자, 의경버스 들이받아 면허 취소 위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의무경찰 20여 명이 타고 있던 경찰버스를 들이받은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자칫하면 면허가 취소될 처지.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 1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IC 나주방향 도로를 주행하던 1t 화물차 운전자 A(20)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기동대 버스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1명당 벌점 5점을 받는데,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탄 피해자가 모두 다쳤다고 가정하면 21명에 벌점이 105점이고, 화물차 동승자도 전치 3주(10점) 부상을 입었다"며 "차선 위반(10점)과 과속을 더하면 면허취소 수준인 121점을 넘어, 12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